화학제품 반덤핑규제 보복성 많다!

KIEP, 개발도상국 비중 73% … 중국의 한국산 규제 22건으로 최다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3%로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월18일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8년 2월1일 기준 19개국으로부터 10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디아,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의한 규제가 73%에 달해 1996년 이후 선진국의 제소보다 많아졌다.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25건), 섬유(17건), 전기전자제품(4건)이 뒤를 이었다.

KIEP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화학, 철강, 섬유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화학과 섬유 분야는 주로 개발도상국이, 철강은 주로 선진국이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규제가 많은 철강산업은 국내기업이 선진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반덤핑 조치가 집중돼 있는 화학과 섬유는 한국과 개발도상국간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22건으로 15건이 화학제품인데 한국의 중국산 반덤핑 규제가 15건이고, 10개가 화학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복성 대응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조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품목의 생산을 정리하는 등 인디아,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무역구조를 개선해 반덤핑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덤핑제도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 조치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제소를 당한 것 만으로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보복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9>